“하필이면 기말고사 기간에…”

신종플루 예방접종 일정 맞물린 中 3 학부모들 항의 ‘빗발’

내신 반영 비율 높은 ‘사실상 고교 진학고사’

광주 27개 중학 겹쳐 “이상증세 땐 어쩌라고…”

광주 A중학교 3학년 교사는 최근 학부모로부터 기말고사 기간에 실시되는 신종플루 예방 접종 시기를 연기해 달라는 항의 전화를 받았다.

이 학부모는 “신종플루 접종 후 어지럼증이나 구토 등의 증세가 있을 수 있다던데, 왜 하필 시험기간에 접종을 하느냐”며 “기말 고사 이후로 접종을 연기해 달라”고 했다.

시험 당일 신종플루 접종이 예정된 광주 B중학교 교장도 교사 회의를 소집해 시험 기간을 하루 뒤로 연기했지만, 학부모들의 항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 학교 교장은 “고교 진학을 앞둔 중학교 3학년은 내신성적 산출 때문에 늦어도 12월 초까지는 기말고사를 마쳐야 한다”면서 “이러한 교육현장의 사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시험기간에 예방접종을 받으라고 해 어이가 없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광주지역 일선 중학교들이 보건당국의 일방적인 신종플루 예방 접종 일정 통보 때문에 학사 운영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고교 진학을 앞둔 중학교 3학년의 기말고사 기간과 신종플루 예방접종 기간이 겹치면서 학부모와 학생들의 항의가 거세다.

이는 내신성적 100%(중1 20%, 중2 30%, 중3 50%)로 고교에 진학하는 현 제도에서 내신 성적 반영 비율이 가장 높은 중 3 기말고사는 사실상 고교 진학 고사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올해 광주에서는 중학교 졸업생 2만3천여명 중 1만6천569명만 인문계 고교에 진학할 수 있는 만큼 중 3학생들의 기말고사에 대한 스트레스도 매우 높은 편이다.

25일 광주시와 일선 중학교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시작된 신종플루 예방 접종은 다음달 9일까지 마무리해야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정부에서 4주내에 학생 예방 접종을 완료하라는 공문을 받았다”면서 “시 교육청과 협의해 학교별 접종 일정을 확정했으며, 일부 중학교에서 접종일정을 변경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지만, 학교 수가 너무 많아 조정은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광주지역 중학교들은 시가 접종 일정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학교의 학사 일정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광주지역 중학교 84개교 가운데 중학교 3학년 기말고사와 신종플루 접종 기간이 겹치는 학교는 모두 27개교에 이른다. 이 중 일부 학교는 기말고사 기간을 1~2일 앞당기거나 미루는 등 일정을 조정했지만, 대부분의 학교는 시험직전이나 시험기간 중간에 신종플루 예방 접종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광주 모 중학교 교장은 “3학년 학생의 기말고사를 12월 1일부터 4일까지로 정해놨는데, 신종플루 접종기간이 12월 2일로 통보됐다”면서 “중 3학년의 특성을 감안해 예방 접종 일정을 조정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현재 전국에서 신종플루 예방접종을 받은 초·중·고교생 중 광주 32명을 비롯한 591명이 접종 후 두통이나 어지럼증, 구토 등의 이상 증세를 보였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호남지역 3명 신종플루 사망

지난주…확산은 주춤

광주와 전남·북 등 호남지역에서 지난주에만 3명이 신종플루에 감염돼 사망했다. 또 이 기간 전국적으로 22명의 사망자가 추가 발생, 신종플루 사망자는 모두 104명으로 늘어났다.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지난주 추가 사망자는 영남권에 사는 33세 남성과 16세 여성 등 비고위험군 2명과 호남권에 사는 39세 여성 등 고위험군 20명이다.

중대본은 이날 “신종플루 확산세가 10월 말 정점을 지나 11월 둘째 주부터 진정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신종플루 사망자는 지난달 25~31일 25명에 달했으나, 이후 11월 1~7일 23명, 8~14일 22명, 15~21일 11명으로 줄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오열하는 유족들 지난 23일 교육훈련 비행중 영암호에 추락해 순직한 고(故)박용규 조종사 등 3명의 산림항공 공무원 합동 영결식이 25일 광주 금호장례식장에서 거행됐다. 유족들이 헌화를 마친 뒤 오열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헬기 조종사 합동 영결식

광주서 산림청葬… 인양 작업 또 연기

영암호에 추락한 산림청 헬기 조종사들의 영결식이 유족과 산림청 관계자들의 애도 속에 열렸다. 그러나 사고원인 규명은 물론 헬기 인양작업도 사고 발생 사흘째인 이날 까지 이뤄지지 못해 유족들을 안타깝게 했다.

지난 23일 정오께 교육비행 도중 영암호에 추락, 순직한 고(故) 박용규(52)·이중배(46)·이용상(42) 조종사의 영결식이 25일 빈소가 마련된 광주 금호장례식장에서 산림청장(葬)으로 치러졌다.

영결식은 고인 약력보고, 영결사, 추도사, 헌화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명박 대통령도 조전을 보내 고인의 업적을 기렸으며, 유족에게는 금일봉이 전달됐다.

정광수 산림청장은 영결사에서 “소중한 산림을 지켰던 산림항공 공무원으로 존경받는 삶을 산 세분의 삶을 기억하고, 유족을 감싸드릴 것을 영전 앞에 엄숙히 약속한다”고 말했다.

영결식을 마친 운구는 전주 승화원으로 옮겨져 화장을 거친 뒤 대전 현충원에 임시로 안치된다. 애초 이날 오전 8시30분께로 예정됐다가 지연된 영결식은 산림청과 유족 측이 장례·보상절차에 합의하면서 거행됐다.

산림청은 숨진 조종사들을 순직처리 하는 것은 물론 국가 유공자로 지정하고 훈장도 서훈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에 힘쓰기로 유족과 합의했다. 또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고인을 대전국립현충원에 안장하기로 했다.

한편 사고 헬기는 인양 업체의 준비 부족으로 인양이 하루 연기 됐다. 국토해양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김명수 조사단장은 “지금으로선 사고 원인에 대해 밝혀진 게 없다”며 “헬기를 꺼내 김포공항 항공철도조사위원회 분석실로 옮긴 뒤 사고 원인을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안마시술소 업주 둘 구속

목포경찰은 25일 신도심에 대규모 안마시술소를 차려놓고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2명을 성매매알선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목포시 하당신도심에 객실 36개를 갖춘 대형 안마시술소를 차려놓고 침대와 월풀 욕조가 설치된 일명 ‘탕방’ 10개를 운영해 총 36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혐의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40억대 사업권 거래 개입 의혹

전남도 간부 공무원 수사

광주지검 순천지청

검찰이 광양의 한 조선소 건립 사업 과정에서 40억원대의 사업자간 사업권 거래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남도 간부 공무원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25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따르면 에스엔씨 조선해양㈜이 지난 2007년 광양에서 조선소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당시 광양시 국장(현 전남도 간부)이던 K씨의 종용으로 해당 부지와 무관한 땅에 설정된 사업권을 40억원에 샀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문제의 사업권이 당시 T사가 ‘국가산단 토지에 공장을 짓겠다’며 부여받은 무형의 권리로 매매행위 자체가 불법인데도 K씨가 매입을 권유했다는 점을 들어 대가성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조선해양 관계자는 “조선소 부지를 이미 확보했지만 K국장의 종용을 거부할 경우 사업허가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아 억지로 샀다”며 “40억원을 T사에 송금한 통장 등 증거물을 모두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K씨는 “회사가 부도가 난 잘못을 나에게 돌리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로, 사업권 문제도 조선해양 측이 사업권자를 소개해달라고 해서 연결해줬을 뿐”이라며 의혹을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군의원 비방 기사 언론인 항소심서 ‘무죄’

공소시효 완료·공익성

군의원을 비방하는 내용의 기사를 쓴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은 언론인에 대해 법원이 공소시효 완료 및 공익성 등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우룡)는 25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완도 모 신문사 발행인 김모(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군의원이 공무원에게 물병을 던진 행위를 기사화한 것은 여론 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이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기사 내용의 공익성 외에도 김씨에 대한 기소 내용 중 ‘인터넷 언론에 의정활동 자료를 유출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을 했다. 현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공소시효가 3년인데도 검찰이 지난해 9월 18일 기소 당시 3년을 넘긴 2005년 6월 기사까지 범죄사실에 추가한 오류를 지적한 것이다.

김씨는 2005년 기사 외에도 지난해 1월 29일과 4월 1일자 신문에 A군의원을 비방하는 내용의 기사를 쓴 혐의로 기소됐었다. 당시 김씨가 쓴 기사는 A의원이 예산심의중 물병을 던진 행위의 여론조사 결과, 폭설피해 부당수령 의혹 등으로,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시효가 지난 부분은 면소 판결을 했으며, 나머지 2건의 기사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선불금 내놔” 종업원 옷·구두 훔쳐

쌍나팔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가게에서 일했던 여종업원의 집에 몰래 들어가 옷 등을 훔친 다방 업주가 경찰서행.

○…광주서부경찰은 25일 김모(27)씨에 대해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0일 밤 10시께 광주시 서구 쌍촌동 이모(19)양의 원룸에 침입해 옷과 구두 등 150만원 상당의 의류 등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는 것.

○…김씨는 지난 3월 초 자신의 다방에서 일하는 대가로 이양에게 80만원을 빌려줬으나 돈을 갚지 않자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는데, 경찰에서 “개업 두 달 만에 다방 문을 닫게 됐다. 이양에게 돈을 갚을 것을 수 차례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났다”고 진술. /이종행기자 golee@